

---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

---

202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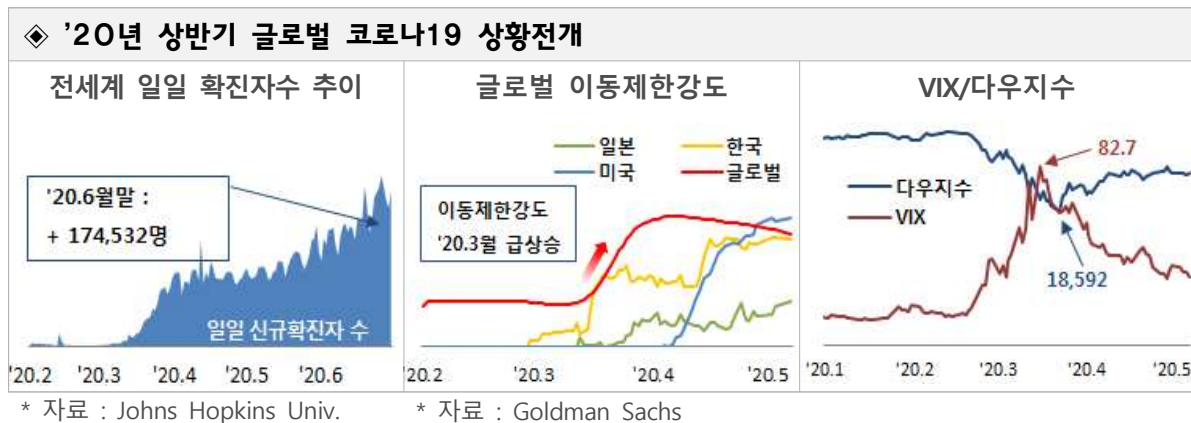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코로나19 위기의 전개	1
II. 위기대응 경과 및 실적	2
1. 위기대응 금융정책 추진경과	2
2. 추진실적	4
III. 위기대응 금융정책 성과	10
1. 경제·금융 전반의 성과	10
2. 분야별 세부성과	12
IV. 앞으로의 과제	14
1. 방역 측면	14
2. 취약부문 지원 측면	14
3. 거시건전성 측면	15
V. 향후 정책 운용방향	17
1. 방역·실물·금융상황 다층적 점검	18
2. 정상화 계획·경로 설정	19
3. Next Finance → 경제역동성 제고	21

## I. 코로나19 위기의 전개

- '20년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상황 전개  
(※ WHO, '20.3.11., "Pandemic" 선언)
- 전례없는 감염병 발생 위기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각국의 봉쇄 조치(lockdown) 강도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위축
  - 금융불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



-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관리
  - 그러나, 대외교역 감소, 경제심리 위축,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출·내수가 줄어들고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
    - 경제·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는 일촉즉발 상황에 직면
- \* 자영업자 :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위축 직면 → 매출급감
- \* 기업 : 경기위축, 공급망 마비 등으로 매출하락, 생산타격 → 재무적 어려움 심화
- \* 금융시장 : 코로나 전개방향 불확실성 고조 → 시장변동성 확대, 금융불안정 확산



## II. 위기대응 경과 및 실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확산 차단, 피해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과감·신속하게 총력을 기울여 정책대응

○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마련·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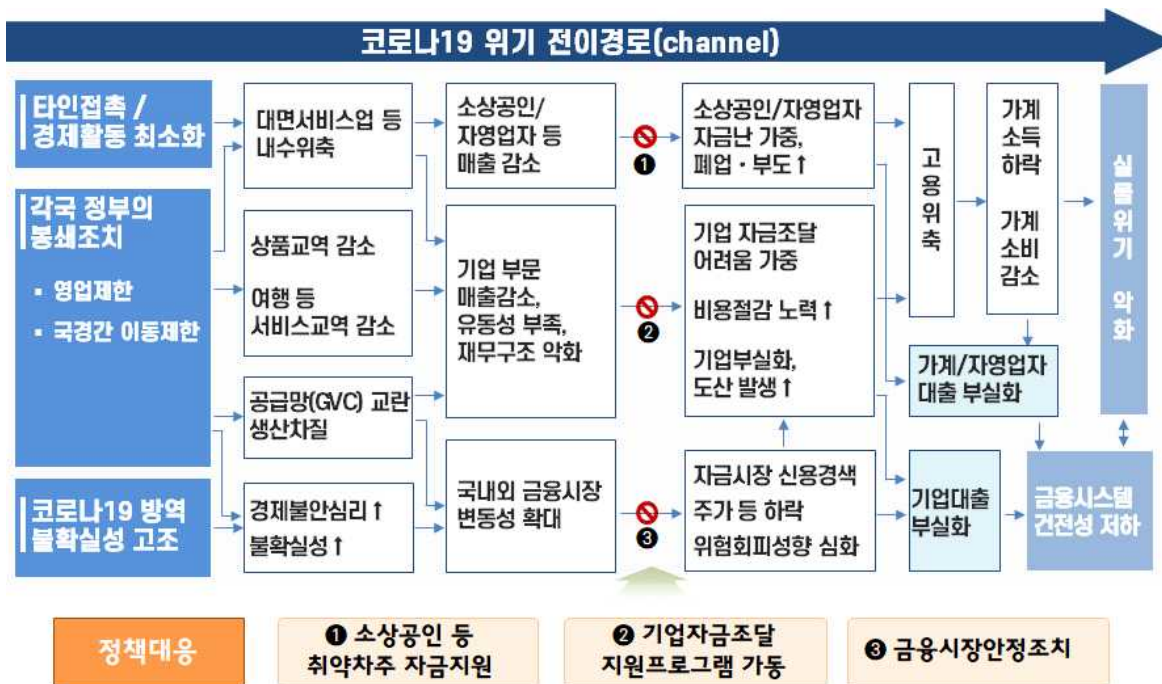
정책분야	주요 대응책
① 금융정책	“175조원+@ 금융대응조치”(GDP 대비 10.3%) 등 금융지원
② 재정정책	소득보전(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등), 고용안정패키지 등 지원
③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1.25%→0.5%), 특별대출제도 등 유동성공급 확대

### 1. 위기대응 금융정책 추진경과

- ‘20.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 대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입
- ‘20.3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외로 본격 확산되면서 “175조원+@ 금융대응조치”를 신속히 마련·시행

#### ◇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의 3대 추진기조

##### ① 위험전이 및 악순환 경로(channel) 차단



## ② 촘촘하고 빈틈없는(exhaustive) 지원

- ①소상공인·중소, 중견·대기업, 취약 개인채무자 등 실물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및 ②거시건전성(금융시스템 안정)·미시건전성(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정책을 병행추진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①금융지원정책	실물 자금지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②금융안정정책	금융시장안정조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감독

### ◆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지원분야 ◆

	대출 보증		중장기채		단기채	주식
	만기연장	신규공급	저신용 SPV P-CBO 등	채안펀드	유동성 공급	증안펀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중소기업	○	○	○			
중견기업		○	○	○	○	
대기업		○	○	○	○	
(구조조정 대기업)						
증권사·여전사				○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 (구조조정 프로그램, 산은 수은 등 포함)

## ③ 불안심리를 압도할 만한 두터운 방화벽(firewall) 구축

- 가용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불안심리 전염·확산을 조기에 차단

### ◆ 금융시장 방화벽(firewall) ◆

채안펀드	증안펀드	저신용 SPV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	10.7조원	10+10조원	40조원

-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 위기전개 등을 감안하며 추가 대응 조치를 보완·마련\*하고, 각 조치별로 운용기간 연장\*\* 등 추진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5월 2차 프로그램 마련후 2차례에 걸쳐 보완하였으며, '20.6월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방안, 캠코 기업자산매각 지원 등 마련

\*\* 예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2차례 6개월씩 기한연장 (~'20.9월말→~'21.3월말→~'21.9월말)

## 2. 추진실적

(※ '21.6월말까지 지원실적)

◆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체계 ◆		
구 분	주요 지원 프로그램	정책 목표
① 소상공인·中企 등 취약부문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li> <li>▶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확대</li> <li>▶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이자유예</li> </ul>	⇒ 취약계층 자금으로 경감
②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신용 SPV, 코로나피해 P-CBO, 회사채·CP 차환프로그램 등</li> <li>▶ 기간산업안정기금, 자산매입지원,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등</li> </ul>	⇒ 재무여건 개선, 자금조달 안정
③ 금융시장 안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및 주식시장안정펀드(10.7조원) 마련</li> <li>▶ 증권사 유동성 지원</li> </ul>	⇒ 금융경색 방지 및 불안심리 차단
④ 금융권 실물지원 여력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li> <li>▶ 금융회사 면책제도 시행</li> </ul>	⇒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

### 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부문 자금지원 강화

-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총 21.5조원 지원

\*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목표) 26.4조원 → (지원, ~'21.6월) 21.5조원

####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① (1차 프로그램) 전체 소상공인을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1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20.4월)

\* 신용등급 구간에 따라, 시중은행(1~3등급)·기은(4~6등급)·소진공(7등급 이하)이 분담지원

- ② (2차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소진,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20.5월)

- ① (1차 개편, '20.9월) 한도증액(1천→2천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1차 프로그램 既수급자의 중복신청 허용)

- ② (2차 개편, '21.1월) 금리·보증료 인하\* 및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출(3조원) 신설

\* (금리) 2%~4.99% → 주요은행 2%대 (보증료) 최대 0.9%p 면제

- (소상공인·中企 특례보증 등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하여 총 17.9조원 지원  
→ 지원목표(15.3조원)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1.下중 종료예정

\* 신보·기보·지신보 특례/신속전액보증 : (목표) 15.3조원 → (지원, ~'21.6말) 17.9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전액보증 주요내용

	특례보증	신속·전액보증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li> <li>■ 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li> <li>■ 그 외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어 지원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중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li> </ul>
보 증 한 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보 증 비 율	■ 95% 적용	■ 100%
보 증 료 율	■ 0.3%p 차감, 최대 1% 적용	■ 0.5%p 차감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45.3조원(목표액 37.8조원 대비 119.8%) 자금지원

- 산은·기은·수은은 특별대출·보증상품을 출시하여 39.9조원 지원

\* 특별대출상품 : 심사간소화, 대출한도배제, 전결권 완화하였으며, 별도 KPI지표를 마련하여 일선 창구에서의 신속한 자금공급 유도

- 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으로 5.4조원의 우대보증 공급

\* 우대보증 : 보증비율 90%이상, 보증료율 0.2%p이상 차감, 기존보증 만기도래시 전액연장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구성

주 지원대상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목표 (조원)	지원실적 (~'21.6말 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필요시 대기업 포함)	▶ 산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5.0	4.5
	▶ 기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10.0	14.9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보증 프로그램	17.4	20.5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5.4	5.4
	합 계	37.8	45.3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20.4월부터 全금융권에서 소상공인·中企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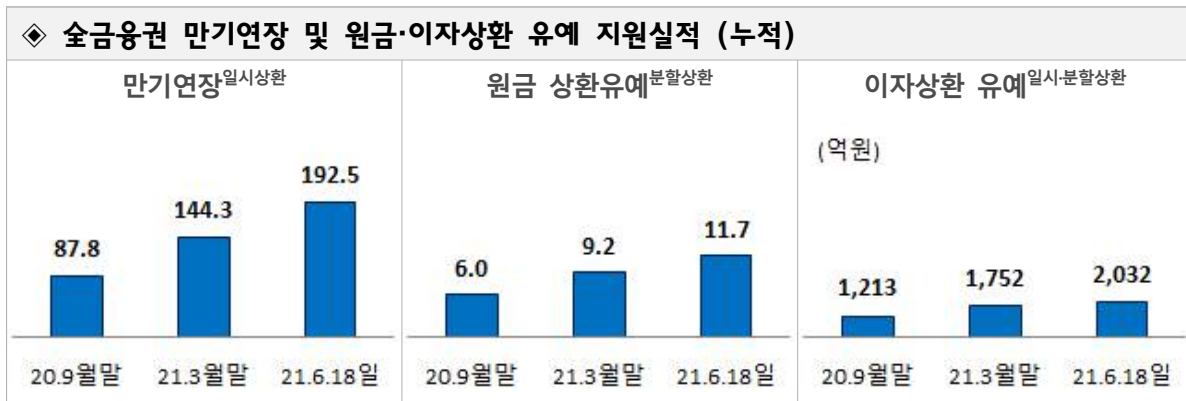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❶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❷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당초 '20.9월말까지 6개월간 시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속 등으로 두 차례 시행기간을 연장('20.4.1.~'20.9.30. → ~'21.3.31. → ~'21.9.30.)

○ '21.4.1일부터 금융권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다양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실시

○ '21.6.25일까지 204.4조원\*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지원

\* 만기연장 192.5조원(75.1만건)+원금상환유예 11.7조원(7.6만건)+이자상환유예 0.2조원(1.5만건)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시행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 신청기한을 당초 '20년말에서 두차례 연장(~'20년말→'21.6월말→'21년말)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실적 (~'21.5월말)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단일채무자) → 원금상환유예(6~12개월) 지원	▶ 1,107억원 (14,468건) 상환유예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채무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다중채무자) → 원금상환유예(최장 1년) 지원	▶ 5,090억원 (12,298명) 상환유예 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캠코, 2조원)	▶ 개별금융회사,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매입 → 원금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지원	▶ 연체채권 594억원(6,942명) 매입완료



## 나.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시행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정부-한은간 협업을 통해 SPV(10조원+(필요시) 10조원)를 설립하고 회사채·CP 3.7조원 매입지원

\* 저신용 SPV 설립('20.7.14.) 이후 총 5조원 캐피탈콜 실시  
→ '21.6월말까지 총 3.7조원(비우량채 2.5조원 포함)의 회사채·CP 매입

- (P-CBO 발행 / 회사채·CP 차환지원 등) 산업은행, 신보 등을 통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8.1조원 발행지원

\* '21.6월말까지 코로나피해 P-CBO(5.9조원), 차환지원(2.0조원), 회사채신속인수(0.2조원) 등을 통해 8.1조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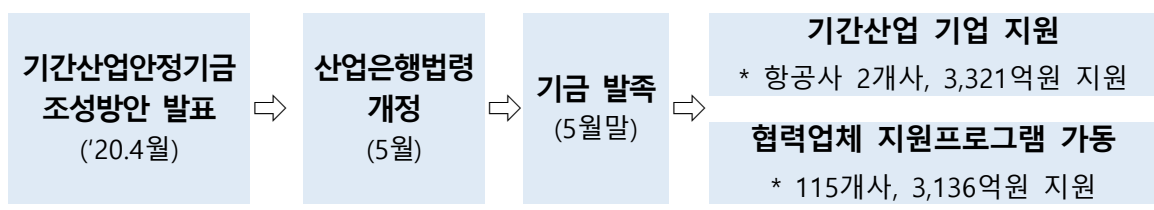
### ◆ 회사채·CP 매입지원 프로그램 개황

		회사채	CP	저신용 SPV	차환지원 프로그램	회사채 신속인수 <sup>2)</sup>	코로나피해 P-CBO <sup>2)</sup>
투자 등급	우량	AA	A1	●	●	-	●
	비우량	A	A2	●	●	●	●
		BBB	A3	●	●	●	●
투기 등급	투기	BB	B	제한적 매입 <sup>1)</sup>	-	●	●
지원규모(~'21.6월말)				3.7조원	2.0조원	0.2조원	5.9조원

1)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BB-등급까지 가능(회사채 한정) 2) 회사채 한정

- (기간산업안정기금) 경제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을 전담지원하는 기금을 신속히 설립하여 항공사, 협력업체 등 지원

### ◆ 기간산업안정기금 주요 추진경과



- (자산매각 지원 등) 기업자산 매각지원,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 (목표) 2조원+@ → (지원, ~'21.6월) 1.2조원

\* 자동차부품업체 지원프로그램 : (목표) 2.5조원+@ → (지원, ~'21.6월) 2.6조원

## 다. 금융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추진

- (증권사 유동성 지원) 단기자금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증권 금융·한국은행을 통해 증권사 대상 유동성 지원(5.0조원 목표)
  - \* 증금의 유동성 공급, 한은의 RP 참가대상·매수 확대 → '20년말까지 총 10.5조원 지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및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 가동\*
  - \* 1차 캐피탈콜로 3조원 조성 → '21.6월말까지 총 2.4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지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주식시장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증안펀드(총 10.7조원 규모)를 신속하게 마련
  - \* 유관기관이 0.7조원 우선 조성 +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가 10조원 조성

※ 시장안정으로 채안펀드·증안펀드 지원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추가 캐피탈콜·매입지원 중단('21.4월 既조치, 금융리스크점검회의)

○ 다만, 제도적 틀은 유지하면서 시장불안시 즉각 매입재개 예정

## 라.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여력 극대화

- (금융규제 유연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노력에 각종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력 적용

### ◆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 조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유예

- (면책제도 개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면책제도 정비

## 【 참고1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추진실적 (21.6월말 기준)

### I. 취약부문 자금지원 강화

#### 01 소상공인 금융지원



#### 02 소상공인·중기 특례보증



#### 03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 04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204.2조원**

(만기연장 204 + 이자상환유예 0.2)

#### 05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64.7조원**

#### 06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 II.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

#### 01 저신용 회사채 매입 SPV



#### 02 회사채·CP 차환지원



#### 03 코로나피해 P-CBO



#### 04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05 기업자산매각지원



#### 06 기간산업안정기금



### III. 금융시장 안정 유지

#### 01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02 증권시장안정펀드



#### 03 증권사 유동성 지원



\*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 '21.6.25. 기준

\*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 '21.5월말 기준 \* 증권사 유동성 지원 : '20.12월말 기준

### Ⅲ. 위기대응 금융정책 성과

-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은 신속·기민하게,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 → 급격히 진행되던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경색을 차단
- ◇ 특히, 취약계층 자금으로 경감, 기업자금조달 여건 개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 회복국면으로의 전환 발판을 마련

#### 1. 경제·금융 전반의 성과

##### 가. [실물] 총력 대응 → 역성장 최소화,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

- 신속·적극적인 정책대응 결과,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

\* 우리나라 '20년 GDP 성장률은  $\Delta 1.0\%$  (G20 국가중 3위, OECD 37개국 중 5위)  
\* 우리나라 경제규모도 세계 12위('19년)에서 10위('20년)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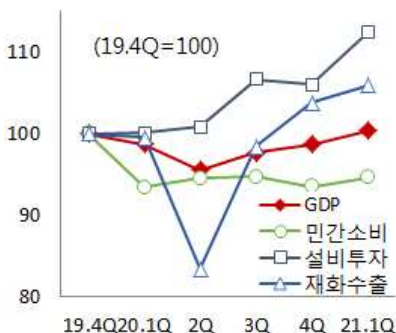
2020년 G20 국가별 GDP 성장률



2019→2020년 경제규모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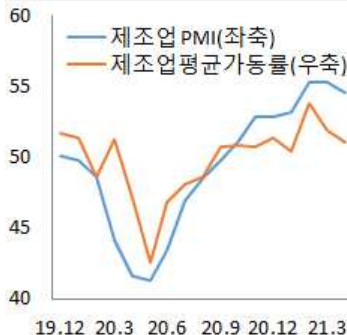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1위	미국	1위	미국
:	:	:	:
8위	이태리	8위	이태리
9위	브라질	9위	캐나다
10위	캐나다	10위	한국
11위	러시아	11위	러시아
12위	한국	12위	브라질

GDP·민간소비 등 수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조업 가동률 및 PMI



\* 자료 : 통계청, IHS Markit

'21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

기관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시기>
IMF	3.6% <4월>
OECD	3.8% <5월>
한은	4.0% <5월>
무디스	3.5% <5월>
골드만삭스	4.5% <6월>

⇒ 실물부문의 견조한 회복흐름을 견인, 이에 국내외 기관들은 '21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

## 나. (금융) 두터운 방화벽 구축 → 위기전이 차단, 금융안정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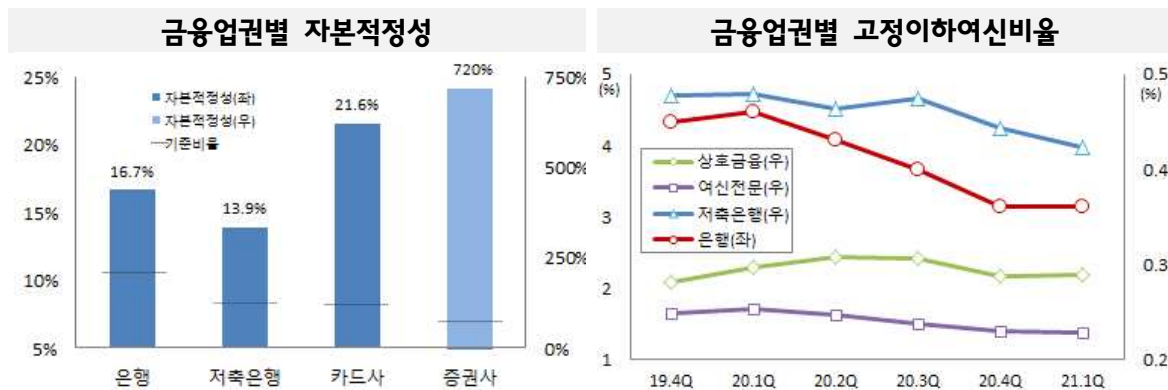
- 두터운 방화벽을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공고히 유지
  -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우량채시장을 우선 안정시켜 과도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비우량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가동하여 채권시장 전반에 시장안정 효과를 확산
  -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신속히 가동함으로써, 주식시장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심리 안정 유도



\* 장기평균 : '10.5월~'21.5월 기준

⇒ 금융부문으로의 위기전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 이에 '20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안정화되며 자금증개기능 회복

- 금융업권별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
  - 금융권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자본적정성 규제기준 상회,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양호한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유지



\* 기준비율 : 은행 10.5% 저축은행 7%/8% 카드사 8% 증권사 100%

⇒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 여력을 유지·확충



## 2. 분야별 세부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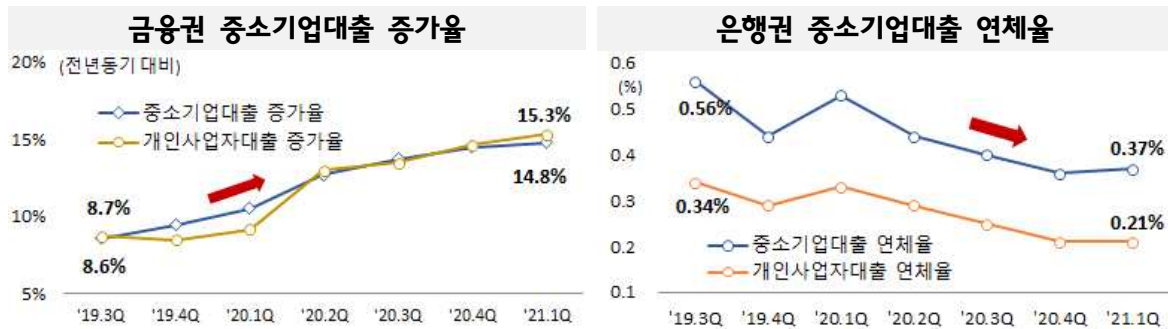
### 가. [자영업자·中企]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유동성고비 극복, 매출회복

- 中企·자영업자 자금지원을 적극 확대한 결과, 금융권 대출 자산중 中企·자영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

\* 대출자산중 중소기업대출 비중 : ('18말) 40.2% → ('20말) 42.7%  
대출자산중 개인사업자대출 비중 : ('18말) 17.3% → ('20말) 18.2%

◆ 금융권 중소기업대출 추산 (금감원 기준,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법인대출→중기대출)·여전사 계)					
(잔액,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출자산 (A)	2,006	2,153	2,302	2,444	2,719
기업대출	963	1,049	1,132	1,222	1,399
▶ 중소기업대출 (B)	763	849	926	1,014	1,161
(비중, B/A)	38.0%	39.4%	40.2%	41.5%	42.7%
- 개인사업자대출 (C)	307	354	398	432	496
(비중, C/A)	15.3%	16.4%	17.3%	17.7%	18.2%

- 대출접근성 확대, 금리부담 경감,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낮아지는 추세



\* 자료 : 금감원(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합계)

- '20년중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21년 들어 中企 업황·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하게 개선



\* 자료 : 국세통계연보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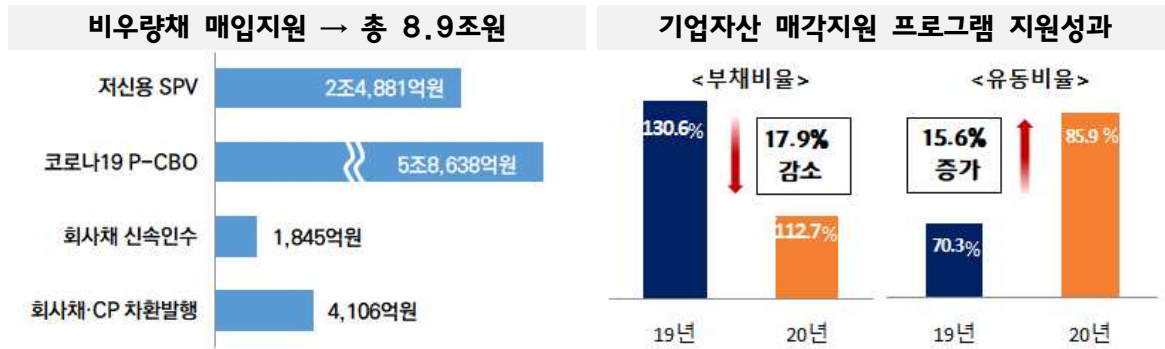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외부충격에 기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기업을 영위하여 재기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나. (중견기업 · 기간산업 등) 자금조달 지원 → 재무안정 유도

-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 결과, 자금조달여건이 안정화되고 기업부도 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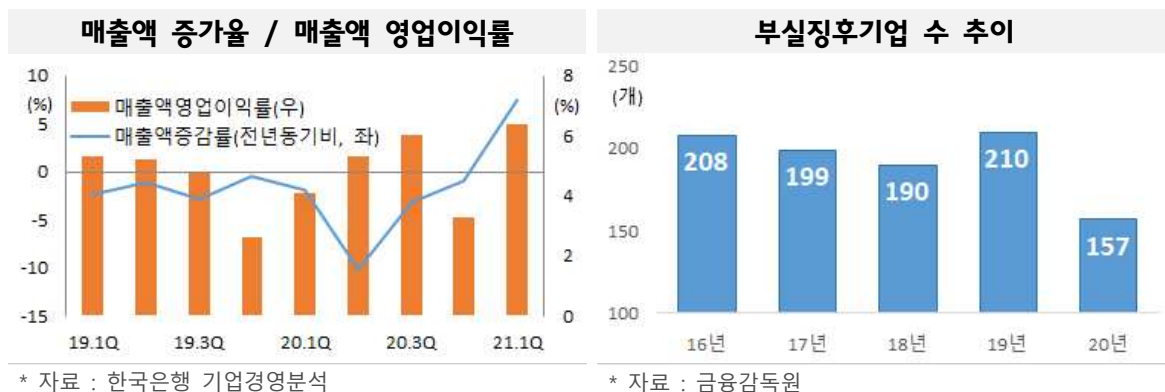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코로나피해 P-CBO 등을 통해 비우량채 8.9조원 매입지원하고,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지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항공 등 주요 기간산업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시장불안 해소

\*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 "최소자금 투입으로 최대성과" 거둬  
 ▶ 대규모 자금지원이 즉각 가능한 상태 → 시장불안 해소, 투자자 심리안정  
 ▶ 도덕적해이 방지, 고용안정 장치 등 부가 → 꼭 필요한 기업만 활용토록 유도

- 이에, 코로나19로 악화되었던 기업 성장성(매출액 등) 및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21년 들어 개선세로 전환



⇒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으로 기업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고용불안 없이 위기상황 관리

\* IMF 평가(21.3월) : "한국의 신속한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신용공급 확대 등 과감한 정책대응(decisive policy response)이 코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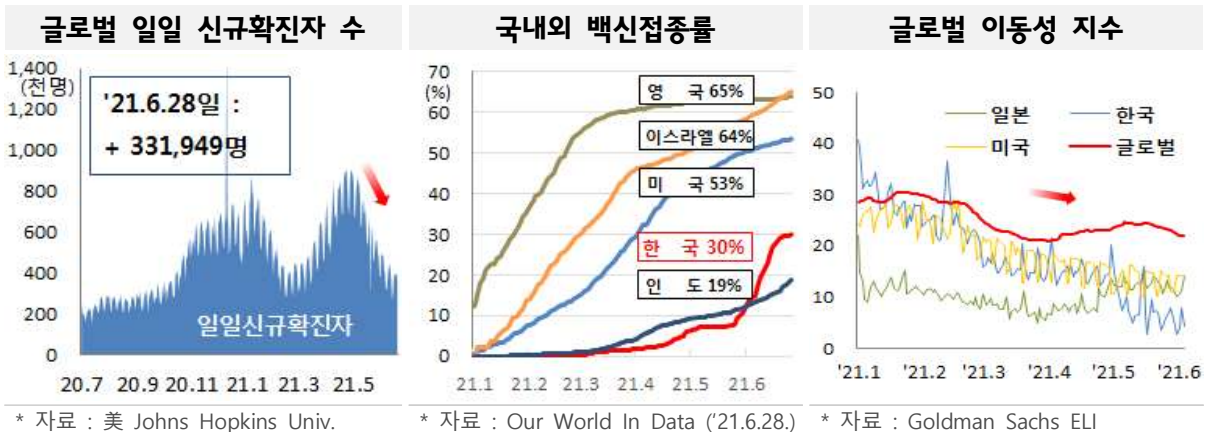


## IV. 앞으로의 과제

◇ 위기의 변곡점을 지나는 現 시점에서 상충되는 정책목표(☑위기의 완전 극복을 위한 실물지원 + ☑잠재위험 관리)의 균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긴급

### 1. 방역 측면

□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백신접종률도 상승하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의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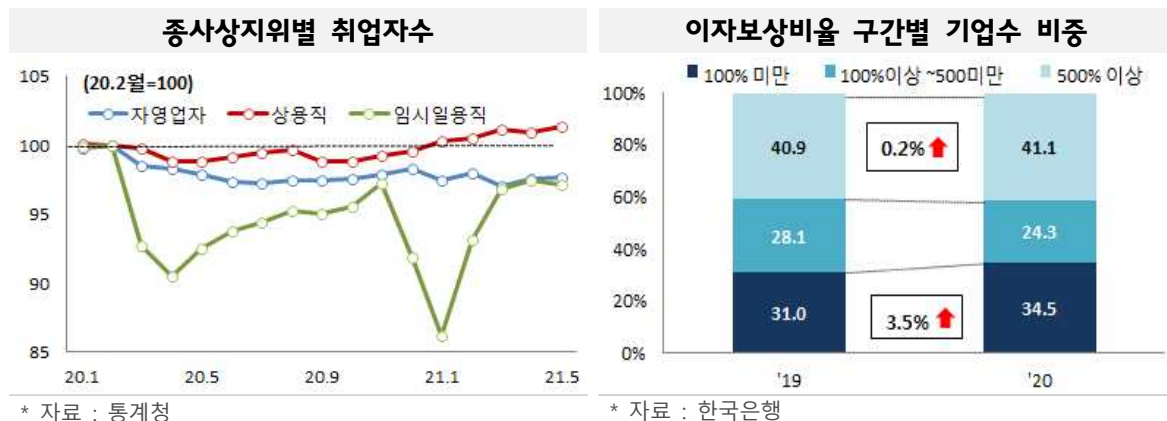


⇒ 방역상황이 경제활동 정상화를 좌우하는 만큼, 집단면역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산세, 경기·금융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2. 취약부문 지원 측면

□ 전반적 실물여건 개선에도, 부문간 회복속도 격차 확대는 불가피  
 ○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취약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 부문에서도 위기극복의 속도차\*\*가 생기는 등 양극화 심화

\* 저임금대면근로자·소상공인(→충격 큼) vs. ICT 등 고숙련직종(→충격 미미)  
 \*\* 수출·신산업 기업(→위기극복 빠름) vs. 내수의존 전통산업 중소기업(→위기극복 더딤)



- 회복속도 격차는 소득·매출 충격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취약성을 누적시킬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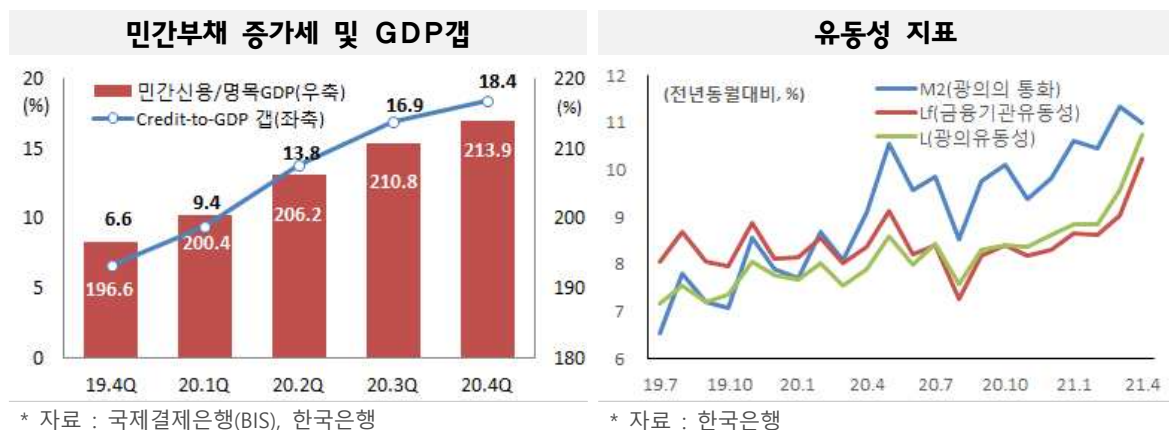
⇒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취약부문 집중지원을 통해 연착륙 지속 도모**

### 3. 거시건전성 측면

- 유동성과 민간부채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부문 잠재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을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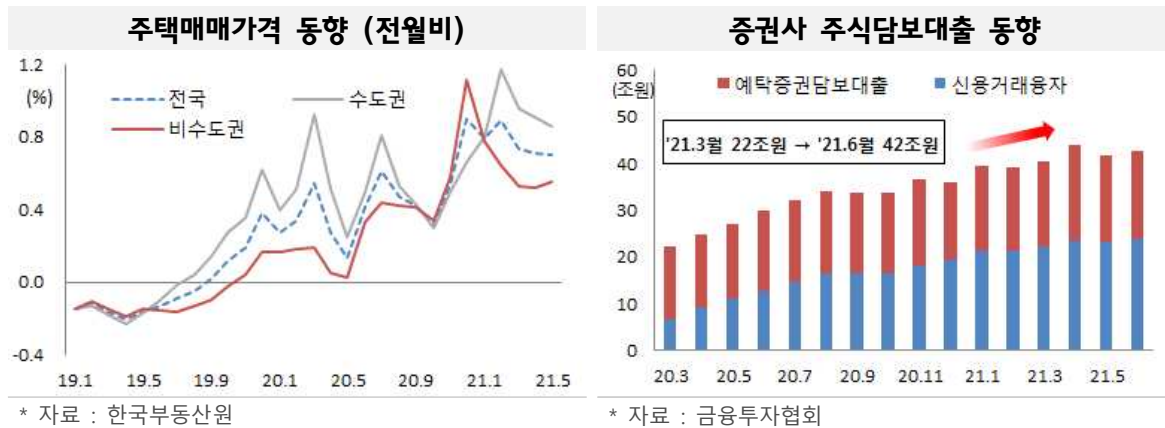
\* M2 증가율 : 최근 1년간 9.0%(+276.5조원) 증가하여 과거 10년 평균(7.1%↑)을 상회  
 \* '20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3.9%로 '19년(196.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장기추세 대비 갭이 18.4%p 수준 [BIS: 10%p 초과시 신용위기 가능성 "경보"]

-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 부실위험이 희석되고 한계차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안정성 및 성장잠재력 약화 소지



⇒ **부채 증가, 잠재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여 확장적 금융지원 기조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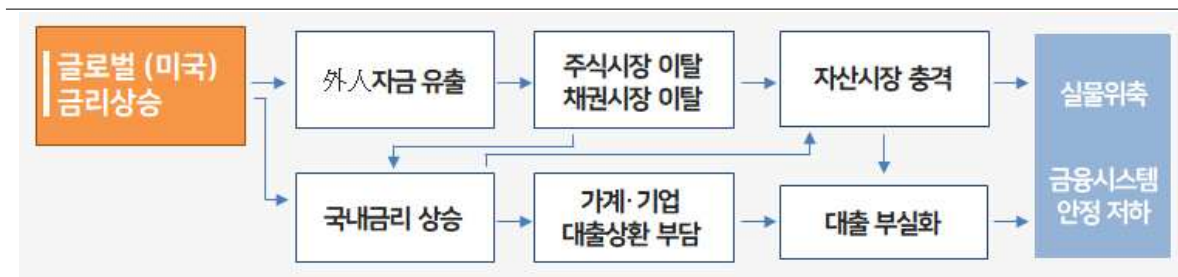
-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민간 레버리지 확대, 차입비용 감소, 위험 선호 증대 등으로 자산(주식, 부동산 등) 가격이 빠르게 상승
  - 투기적 수요에 의해 자산가격 상승세가 뒷받침될 경우, 시장 여건 변화·투자심리 위축시 급격한 가격조정이 발생하여 거시 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 美 테이퍼링, 시장금리 상승 등 글로벌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발생 소지
  -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美 Fed 금리인상 등 긴축 가시화 가능성
  - 美 금리인상은 외국인 자금유출, 국내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자산 가격 조정,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질 소지

◆ 글로벌 금리상승의 국내 파급경로



⇒ 대외리스크 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금리변동 등에 대비할 필요

## V. 향후 정책 운용방향

- ◆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다층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진단**  
→ **정책운용방향을 제시·소통**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 위기극복이 가시화되는 적정시점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 “**정상화의 계획(plan)·경로(path)**” 설정

###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정상화 추진원칙



- ①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도모
  - ▶ 부채위험 관리, 자산시장 투기수요 차단, 대내외 리스크 모니터링·대비
- ②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
  - ▶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 개인채무자 등 취약부문 지원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대상·혜택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
- ③ 금융정책 정상화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추진
  - ① 금융시장기능(선별, 가격제시)의 원활한 작동 유도
    - ▶ 금융의 선별기능(screening)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 ▶ 금리 등 가격변수를 정상화하여 정상채주의 디레버리징 유도
  - ②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
    - ▶ 금융지원 프로그램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방역·실물여건 등 악화시 유연하게 방향·속도 재조정
  - ③ 금융지원이 ‘응급처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활과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 1. 방역·실물·금융상황 다층적 점검 → 진단-대응체계 운영

※ '21.3월부터 진단-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점검 워킹그룹 운영중

◆ **[진단]** 방역·실물·금융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대표 지표(15개 분야)를 활용 → 現 상황을 ①위기지속 단계, ②회복 단계, ③정상 단계로 진단

\*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 운영 개시('21.3월~) → 주기적으로 상황진단  
 ▶ 운영목적 : 코로나19 전개상황, 실물여건, 금융위험 누적여부 등을 점검  
 ▶ 구성 : 금융위(주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학계 전문가 등

◆ **[대응]** 상황진단 단계별로 코로나19 금융정책 운용경로(path) 마련

○ 금융당국의 상황인식, 정책 운용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하면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대응



## 2. 정상화 계획 · 경로 설정 →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가. 부채누증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 금융안정 유지

- (가계부채) 장기적 시계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 하반기중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도 주력
- (기업대출) 금융지원 기조 하에서 잠재 부실위험 누적에 대비하면서 부실위험이 높은 차주군 식별·관리
- (대외리스크 관리) 美 테이퍼링 등 대외변수의 영향 파급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충격 등 취약요소를 점검·보완

### 나. 취약차주 지원프로그램 : 위기극복시까지 금융접근성 유지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지원 지속
    - 금융접근성(대출한도)은 유지·확대하면서, 심사기준·가격변수(대출금리·보증료·보증비율 등)는 점진적으로 정상화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와 연착륙을 유도
    - ※ 방역상황, 실물여건, 부채위험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시점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정책 재정비
    - 유예종료 이후에는 차주별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제공
    -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및 금융권의 자체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 \* [정책금융기관] 신보 밸류업/산은 재무안정 동행/기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119/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21.12월까지 지원을 지속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

## 다. 기업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 : 비우량기업 유동성지원에 주력

-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기한을 연장(~'21년말) 하여 비우량채 매입지원 지속
  - 추가 캐피탈콜 없이 現 지원여력(1.6조원)을 활용하여 지원
- ☐ (P-CBO, 차환지원프로그램 등) 매출급감 기업, 저신용 기업 등 회복속도가 더딘 기업에 대한 보완지원 역할 수행
  - \* P-CBO : 매출급감/저신용등급 기업 등의 프로그램 한도 확대 등
  -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 : 비우량채 지원 확대, 장기자금조달 지원 등
- ☐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 위기의 완전극복 시까지 시장 안전판 기능 지속 수행

## 라. 시장안정 프로그램 : 매입중단하되, 시장여건 악화시 즉각 재가동

- ☐ (채안펀드·중안펀드) 시장 여건이 안정적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낮은 편 → 추가 캐피탈콜·자산매입 중단
  - 다만, 시장여건 악화시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틀을 유지하면서 방화벽(firewall) 역할 수행

## 마.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및 미시건전성 관리

-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유연화 원칙\*에 입각하여 각 조치별로 연장·보완여부를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정상화
  - \* 금융규제 유연화 원칙('20.4월)
    - ▶필요성 :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정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 ▶한시성 :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취약부문 지원여력을 유지하면서, 자산부실화 등 건전성 저하 소지에 대비



### 3. Next Finance → 경제역동성 제고

#### 가. 확대된 유동성이 성장잠재력 제고에 활용되도록 자금배분 전환

- ☐ 디지털·그린 뉴딜 등 차세대 新산업·高생산성 분야에 대한 금융의 자금중개·자금공급 강화
  - ① 뉴딜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의 레버리지 역할 + 민간금융 공급(blended finance) 강화”를 통해 투자확대 유도
  - ② ESG 공시 확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구축 등 녹색금융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린분야 금융중개 선도
  - ③ 사업재편·업종전환, 글로벌공급망(GVC) 변동 등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 뒷받침
- ☐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한계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 축소

#### 나. 코로나 위기·구조적 변화 충격을 완충하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 ☐ 차별화된 코로나 충격이 취약부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흔(scarring effect)을 남겨 경제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용적 기조 강화
- ☐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을 금융권이 적극 뒷받침

#### 다. 빅테크·핀테크<sup>發</sup> 금융역동성 제고를 통해 위기극복·경제활력 견인

- ☐ 빅테크·핀테크 진출 확대, 규제개선 및 공정경쟁 확립, 서비스 및 시장구조 변화 등을 통해 금융전반의 혁신흐름 확산
- ☐ 혁신흐름이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금융역동성(financial dynamism)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견인하도록 유도

## 【 참고2 】 코로나19 금융정책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 및 정책제언

### ◆ IMF, WEO/GFSR ('21.4월) 등

- ☐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가 유발한 충격을 흡수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유지
- ☐ 다만, 정책대응 과정에서 기업부채 급증, 과도한 시장의 위험추구 행위 등 부작용 유발 → 금융취약성 상승, 경제 하방리스크 증폭 우려
- ☐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속가능한 포용적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시차를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관리 대응을 신속히 취할 필요
  -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은 금융여건을 광범위하게 긴축시키는 상황을 피하면서, 잠재적 취약성에 정교하게 대응 가능
- ⇒ 거시건전성 정책수단(macprudential tools), 금융시스템 안정 완충장치(buffer)를 조속히 마련·운용해야 함
  - ① 갑작스런 자산가격 조정과 자금흐름 변화에 대비
  - ② 부동산값 상승 등과 관련하여 LTV·DSR 등의 정책수단 도입 필요
  - ③ 비은행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누적에 대비하는 정책수단 마련
  - ④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
- ☐ 상황전개 단계별 정상화 경로\* 마련
  - \* 예 : [1단계] 위기극복 → [2단계] 회복세 공고화 → [3단계] 미래투자

### ◆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논의 ('21.6월)

- ☐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 상승, 과잉부채를 유발 → 부채 관리, 회생이 어려운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당국이 주력해야 할 시점
  -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테스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의 진폭을 확대시킨 요인, 금융권이 자본 여력·규제유연화에 비해 실물지원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 등 점검 필요